

대학자율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와 흥익대 학교특성화사업단 공동 주최로 2008년 4월 18일(금) 14시 상암동 KGIT 4층 대강당에서 “대학자율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4회 대학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고등교육의 주요 이슈인 ‘대학자율화’에 대해 문용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기조 발표를 하였고, 주제 발표는 동아대 박우순 교수, 가천의 과학대 최미리 교수, 경희대 정원용 교수가 각각 교무, 기획·재정, 입시 등 분야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발표에 대하여 강병운 고등교육연구소 소장(대교협), 김종하 입학팀장(계명문화대), 박남기 교수(광주교대), 신현대 총괄지원팀 과장(성균관대), 신태진 교수(연세대), 오대영 국제부장(중앙일보)이 토론을 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 대학 교무·기획·입학처장들을 비롯하여 대학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올바른 대학 자율화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였다.

문용린 전 장관(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은 기조발표에서 대학자율화와 정부 재정 지원은 별개라고 하면서 대학자율화가 정부의 대학지원에 대한 축소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 해 동안 약 4조 8,000억 원인데 OECD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10조 이상은 되어야 하며, 대학발전과 경

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이 확보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우순 교수(동아대 행정학과, 전 교무연구처장)는 ‘교무·학사부문의 대학 자율화’ 발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도 커다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율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고, 자율화의 범위, 접근방법, 기대효과 등에 있어서도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의 대학, 유관기관 및 교육단체 등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자율화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대학들 또한 대학 스스로 내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무·학사부문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대학의 교수 채용에 있어서는 명백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학이 부담하도록 원칙적으로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국책 사업 지원에 있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원확보율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는데 국책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개발, 특히 사전적인 조건보다는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두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국책사업 진행방법과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대학 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현재 시간강사들에게 실현하기 어려운 전임으로의 전환을 약속하기 보다는 시간강의로 현실화와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나 정부와 대학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최미리 교수(가천의과대학 기획처장)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핵심 정책과제: 기획·재정부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이 국립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 구조 때문에 대부분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다시 등록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사립대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부문 재정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예를 들어 2004년 국회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정완용 교수(경희대 입학관리처장)는 ‘대학자율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입시부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역할은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재정지원과 최소한의 조정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입전형제도의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입학전형제도의 사전 예고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대학 간 우수학생 선발 경쟁이 심화되면 대학 간 서열화가

조장되는 동시에 입시제도 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과 타 대학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대학협의체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대학 간의 협력과 공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강병운 소장(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은 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을 대강화(大綱化)하여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 모든 사항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법령 규정방식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 운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대학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대학재정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기 교수(광주교대)는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화 방향을 논할 때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접근하고, 한국형 대학자율화 모형을 고려해야 하며,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대학 자율의 수준을 공개적으로 탐색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태진 교수(연세대)**는 대학들이 더 이상 점수 위주의 학생 선발보다는 대입 자율화에 도입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지원학생의 능력과 재능, 인성, 적성, 학업능력, 지도력 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여 융통성과 다양성이 전제된 입학선발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대영 부장(중앙일보)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조정 문제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듯이 대학 간에도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표출되었고, 심지어 대학 내부에서도 학과별로 입장이 다를 때가 많은 바, 이런 문제를 대학들이 자율조정하지 못하면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하였다. 따라서 대학들 간의 자율 조정 기능을 신장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리_ 김정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